



S O L U T I O N P A P E R

2017

# 서울시민의 문화적 권리 보장 차원에서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4대 개선방안 수립

백선희

# 요약

---

## 문화예술교육 급성장 불구 양적 팽창 치중해 여러 문제점

문화예술교육은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 및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을 시작으로 지난 10여 년간 크게 성장하였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 예술강사 중심의 양적 팽창은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성장이 담보되지 못한 채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학교와 사회로 이원화된 구조, 공급자 중심의 분배식 사업지원, 예술강사의 고용불안 및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관리 미흡,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접근성 부족 등이 있다. 한편 서울시는 「2030 서울문화플랜」을 발표하면서 시민의 문화적 권리 보장을 천명하였으며, 이를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문화예술교육 강화를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 차원의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한 개선방향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 문화예술교육 정책채널 구축하고 교육허브 확대도 바람직

문화적 권리 보장은 시민 스스로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역량 확대와 직접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로 달성될 수 있다. 시민 문화권 보장은 일상생활에서 문화예술교육의 기회 및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자원과 인력을 활용하여 시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역사회 기반의 평생학습체계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울형 문화예술교육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실행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 추진체계 혁신 및 관련 인프라 확충이 요구된다. 자치구별 문화예술교육 협의체 및 ‘(가칭)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실무위원회’ 설치와 문화예술교육 허브로서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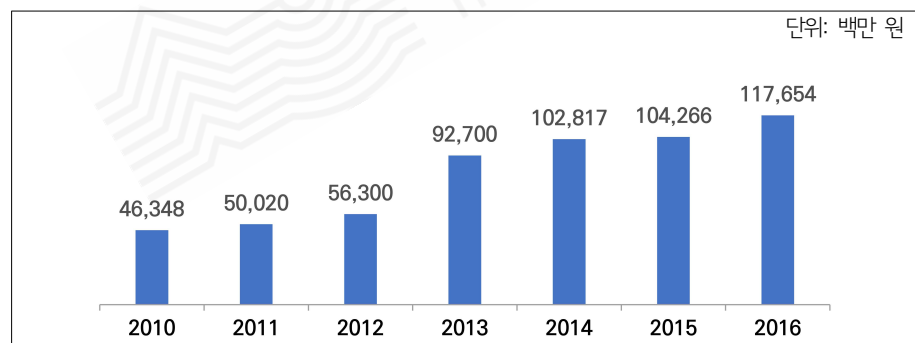
## 01 /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 질적 성장으로 전환 요구

### 1\_문화예술교육, 제도 갖춰진 2004년부터 양적 급속 확대

#### 학교문화예술교육, 10년간 참여학교는 1.5배, 학생 수는 2.7배 증가

우리나라에서 문화예술교육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2000년대 이후의 일이다. 제도적 체계가 갖추어진 것은 2004년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공동으로 수립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을 기점으로 볼 수 있으며, 이후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 및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으로 본격화되었다. 이와 같은 제도적 기반에 정부주도의 정책이 더해지면서, 문화예술교육은 빠른 속도로 확대되었다.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교육예산은 1,176억 원으로 2010년 대비 2.5배 증가하였다. 2005년에서 2015년 사이 문화예술교육의 성과를 살펴보면, 학교문화예술교육 참여 학교는 3,214개교에서 8,216개교로, 참여 학생 수는 71만 명에서 266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예술강사도 1,628명에서 4,916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림 1]  
연도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  
예산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각 연도, 예산·기금 운영계획(기관운영예산(한국문화예술진흥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및 2012년 토요체육학교운영사업, 2010년 유네스코 예술교육세계대회 개최예산 제외).

[표 1]  
문화예술교육  
성과(2005~2015년  
변화)

구분	내용
학교 문화예술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학교 수: 3,214개교 → 8,216개교(155.6% 증가)</li> <li>· 참여학생 수: 710,000명 → 2,660,000명(274.6% 증가)</li> <li>· 예술강사 수: 1,628명 → 4,916명(202.0% 증가)</li> <li>· 지원 교육시수: 156,048시수 → 1,455,206시수(832.5% 증가)</li> </ul>
사회 문화예술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기관 예술강사 수: 233명 → 539명(131.3% 증가)</li> <li>· 지원사업 수: 3개 → 23개(666.7% 증가)</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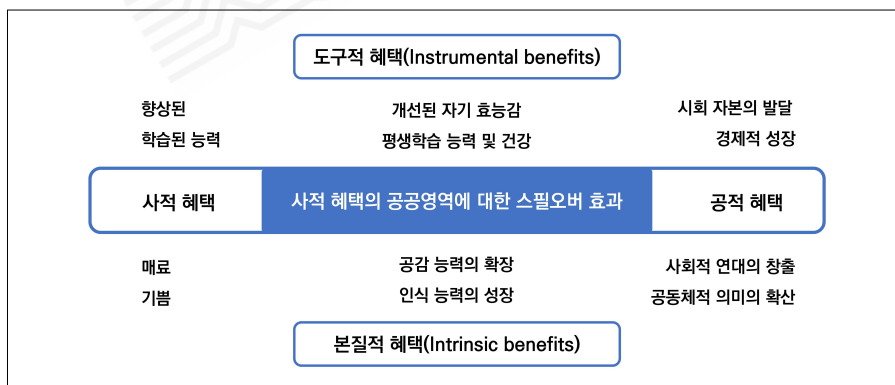
자료: 조현성, 2016, 「문화예술교육정책 중장기 추진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35.

## 2\_시민문화권 보장 차원에서 문화예술교육 방향 재검토 필요

### 문화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도록 문화예술교육 방향 정립할 시점

문화예술교육은 공감과 인식능력 확대 등 문화예술 경험 자체가 주는 본질적 효과와 문화예술을 활용해 자기효능감 개선이나 평생학습능력 증진 등과 같은 도구적 효과를 갖는다. 또한 사적 영역에서의 학습이 공적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사회자본과 경제 성장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은 단순히 예술기능의 연마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사회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인식하고 해결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문화예술교육정책이 구상되던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하여 매우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다. 노인인구와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고용불안, 개인주의 확산 등으로 삶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문화다양성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경제적 불평등은 교육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를 일으키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산업·직업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데, 자동화 대체 확률이 낮은 30개 직업 중 50%가 문화예술관련 직종으로 파악됨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될 가능성이 크다<sup>1)</sup>. 따라서 교육환경의 변화를 전반적으로 고찰·예측하고 그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문화예술교육의 비전과 방향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림 2]  
문화예술교육의  
효과

자료: Rand Institute, 2004, Gifts of the Muse: Reframing the Debate about the Benefits of the Arts, Arthur Brooks. 박신의, 2016, “예술의 사회적 영향” 연구 분석과 정책적 함의, 「2013 문화정책논총」 제27집 1호, p.69,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재인용.

<sup>1)</sup> 조현성, 2016, 「문화예술교육정책 중장기 추진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p.59-64.

## 2030 서울문화플랜 추진전략 중 하나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천명

2013년 12월 30일에 제정된 <문화기본법>은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sup>2</sup>. 이는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문화예술교육, 동아리활동 등 자발적 문화활동에 대한 참여 욕구가 증대함에 따라, 누구나 문화적 권리를 보장받는 환경을 구현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이의 연장선에서 서울시는 2016년 6월에 서울시 문화기본계획인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시민문화권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선언적인 권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하는 전략들이 담겨 있다.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강조하면서, 문화정책의 대상으로서 시민 관점 역시 변화하였다. 시민은 수동적인 문화향유의 대상이 아니라, 문화예술의 생산자인 동시에 관람자인 프로슈머(prosumer)라는 것이다. 문화예술동아리가 확산되고 있으며, ‘생활예술오케스트라’, ‘메이커 페어’ 등 시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문화예술활동의 급속한 성장 등은 시민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문화활동의 증거들이다.

따라서 시민의 문화적 권리 보장은 시민 스스로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역량 확대와 직접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이에 서울문화플랜 추진을 위한 실행과제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존의 문화예술교육 방식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환경 속에서 시민의 문화적 권리 구현을 위해 가치지향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을 받는 공간이 학교나 문화센터 등 전통적인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회관, 문화재단, 창작시설, 마을예술창작소, 도서관, 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으로 매우 다양해졌다는 점,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수요 역시 매우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도 문화예술교육 방향성 정립 과정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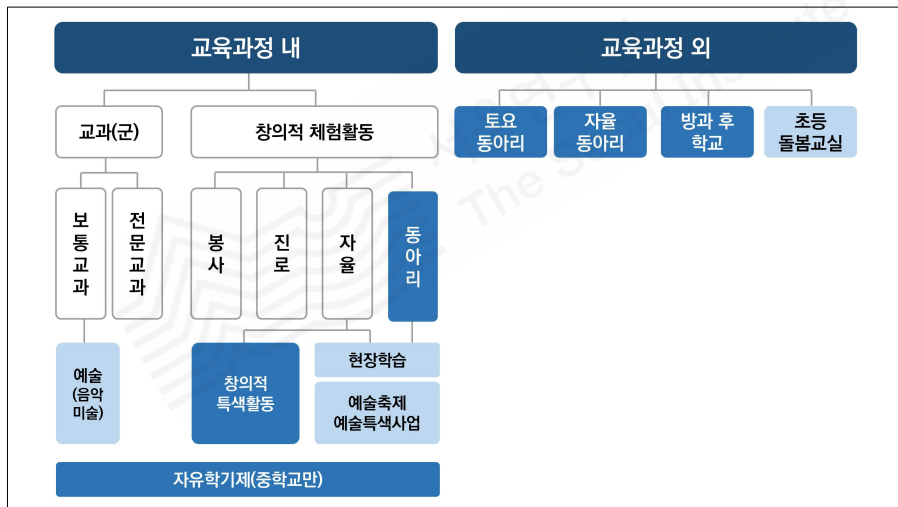
<sup>2</sup> <문화기본법>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를 가진다.

## 02 /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비전·철학 부재 등 문제점

### 1\_문화예술교육, 학교는 다양화... 일반시민은 미흡

####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초등학교·동아리 중심으로 다원화 체계로 시행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은 교육과정 개편을 거치면서 다양한 체계로 시행되고 있으며, 크게 ‘교육과정 내’ 교육과 ‘교육과정 외’ 교육으로 구분된다. 교육과정 내 문화예술교육은 보통교과 내 예술교과(음악·미술) 교육과 학급 또는 학년 단위로 운영되는 창의적 체험활동 내 창의적 특색활동 및 현장학습이나 예술제, 동아리 활동으로 구성된다. 교육과정 외 문화예술교육은 토요동아리, 자율동아리와 수요자 부담으로 운영되는 방과 후 학교와 초등돌봄교실로 구성된다.



[그림 3]  
학교문화예술  
교육체계

출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5a, 「2015 학교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p.36.

학교 교육과정 내 문화예술교육의 비중은 초등학교에서 가장 높고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낮아진다. 전체 교육과정 수업시수 중에서 음악·미술 교과 시수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15.9%, 중학교 8.1%, 고등학교(일반고) 4.9%로 비중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서울시 학교예술강사의 수업시수 현황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 초등학교가 53.7%로 가장 많고, 중학교 28.8%, 고등학교 15.5%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문화예술교육 운영비율은 낮아진다.

문화예술교육 형태는 예술동아리를 운영하는 학교 비율이 90%대로 가장 높아

동아리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교생 대비 예술동아리 가입 학생 비율은 중학교가 약 40%로 가장 활발하며,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25%대로 전교생의 4분의 1 이상이 예술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주요항목		초	중	고
교과군	전체 교과군 중 예술교과 시수 비중(전국수치)	15.9	8.1	4.9
창의적 특색활동	문화예술교육 운영학교 비율	78.4	53.8	48.4
동아리 활동 <sup>3</sup>	예술동아리 운영학교 비율	90.9	95.5	98.0
	전교생 중 예술동아리 가입학생 비율	25.6	39.7	27.0
방과 후 학교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학교 비율	97.7	84.5	49.2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중 문화예술프로그램 비율	29.8	18.2	8.2
기타	예술축제 운영학교 비율	77.8	95.2	94.0
	문화예술 현장학습 운영학교 비율	80.1	81.3	68.3
	자유학기제 시행학교 중 문화예술교육 운영학교 비율		97.0	

[표 2]  
2015년 기준  
서울시  
학교문화예술  
교육 운영 현황

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5, 「학교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서울」.

구분	수업시수					합계
	초	중	고	대안	특수	
수업시수	120,294	64,467	34,756	544	3,878	223,939
비율	53.7%	28.8%	15.5%	0.2%	1.7%	100%

[표 3]  
서울시  
학교예술강사  
교급별 수업시수  
현황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혁신과, 2016. 7, "2016 서울지역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현황".

## 일반시민 문화예술교육은 문화복지시설 중심... 여성참여자 남성 2배

아직까지 서울시 일반시민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통계는 구축되지 못한 상태이다. 다만 「2015 평생교육실태조사」를 통해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시민 중 문화예술교육을 받는 비중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평생교육 전체 프로그램 중 문화예술프로그램 수 및 학습자 수는 각각 29,333개(26.8%), 4,492천 명(24.5%)으로 직업능력향상(40.4%, 41.4%) 다음으로 많았다.

<sup>3</sup> 창의적 체험활동 내 동아리, 토요동아리, 자율동아리를 포함한 수치

또한 성별 비중을 살펴보면 여성 69.4%, 남성 30.6%로,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 이상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의 다른 주제 프로그램과 비교해 보았을 때도 문화예술 프로그램에서 남녀 참여비율이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문화예술교육이 여성 참여자 위주로 진행됨을 알 수 있다.

한편, 평생교육법외기관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참여자가 88.9%로 평생교육법상 기관(11.1%)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평생교육체계에서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시설 및 복지시설로 구성된 평생교육법외기관에서 주로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다<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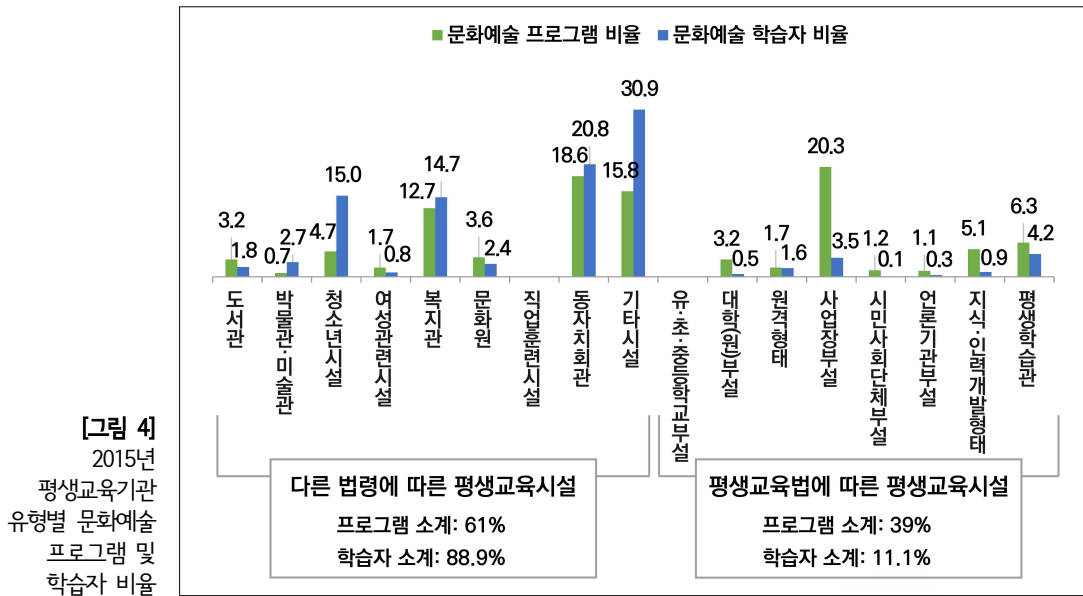
기관 유형별로 문화예술프로그램 비율을 살펴보면 사업장부설시설(백화점·대형마트 문화센터 등)(20.3%)이 가장 높고, 그다음이 동자치회관(18.6%), 기타시설(구민회관, 자원봉사센터 등)(15.8%), 복지관(12.7%)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자의 비율은 동자치회관(20.8%), 기타시설(구민회관, 자원봉사센터 등)(30.9%), 청소년시설(15%), 복지관(14.7%) 순으로 많았다. 또한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백화점·대형마트 등과 같은 사업장부설 시설의 경우 프로그램 수는 많으나 프로그램당 참여자 수가 적고, 반대로 기타시설 및 청소년시설의 경우 프로그램당 참여자 수가 많은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sup>4</sup> 평생교육기관은 크게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법상기관과 평생교육법의 다른 법령에 따른 평생교육법외기관으로 분류된다. 흔히 문화시설로 여겨지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등이 평생교육법외기관에 속한다.

구분	내용
평생교육법외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청소년시설, 여성관련시설, 복지관, 문화원, 직업훈련시설, 동자치회관, 기타시설(구민회관, 야학, 자원봉사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평생교육법정기관	유·초·중·등학교 부설, 대학(원)부설기관, 원격형태(원격평생교육원, 원격형태교육시설 사이버평생교육원 등), 사업장부설(백화점·대형마트 문화센터, 직장부설 교육훈련시설 등),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관련, 평생학습관

자료: 서울시 평생교육정책관, 「2015년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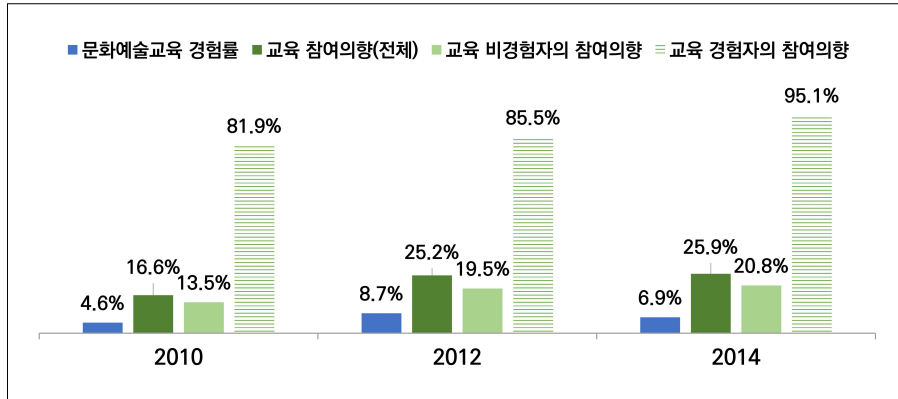
자료: 서울시 평생교육정책관, 「2015년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 결과」

### 문화예술교육 경험자의 교육 추가참여 의향이 미경험자보다 4.5배 많아

「2014년 문화향수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회문화예술교육 경험률은 2012년 이후 하락세를 보여 2014년에는 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향후 1년 이내 문화예술교육교육 참여의향은 25.9%로 실제 경험률에 비해 훨씬 높았으며, 특히 문화예술교육 경험자가 미경험자에 비해 약 4.5배 높은 95.1%로 문화예술교육 참여의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문화예술교육의 경험재적 속성 때문에 참여 경험이 있는 이들 일수록 수요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을 받으려고 할 때 애로사항은 시간부족(28.1%), 높은 비용(26.3%), 관심 강좌 부족(21.0%) 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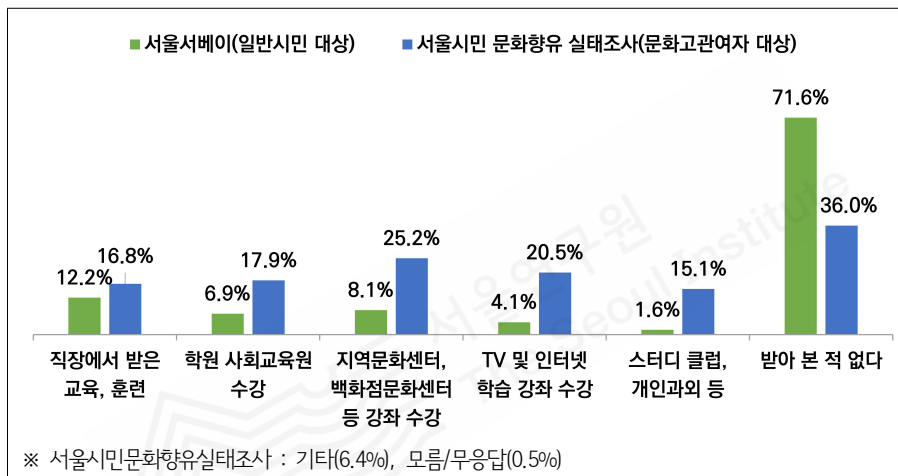
「2015 서울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2014년 학교 교육을 제외한 문화, 예능, 예술 및 교양과 관련한 서울시 교육경험률은 28.4%로 조사되었다. 앞서 살펴본 전국통계 수치와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문화, 예능, 교양 등 문화예술교육의 범위가 더 크게 설정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같은 질문에 문화고관여자(Culture Heavy User)는 63.5%로 2배 이상 문화예술교육참여율이 높았다.

문화예술관련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 서울서베이 조사에서는 '직장에서 받은 교육, 훈련(12.2%)'이 가장 높았고, 문화고관여자 대상 설문에서는 '지역문화센터, 백화점 문화센터 등 강좌수강(25.2%)'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5]  
1년 이내  
학교교육 외  
문화예술교육  
경험과 향후  
1년 이내  
문화예술교육  
참여의향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각 연도, 「문화향수실태조사」



[그림 6]  
서울시 1년  
이내 학교교육  
외 문화예술  
교육 경험

출처: 서울문화재단, 2016, 「2015 서울문화지표 조사연구(2014년 기준)」, p.209.

## 교육청도 1학교 1문화예술브랜드 지원 등 문화예술교육 확대 노력

교육부는 2018년부터 시행되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창의융합형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으로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제시하였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예술 관련 교과의 가장 큰 변화는 초·중·고 전반에 연극교육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sup>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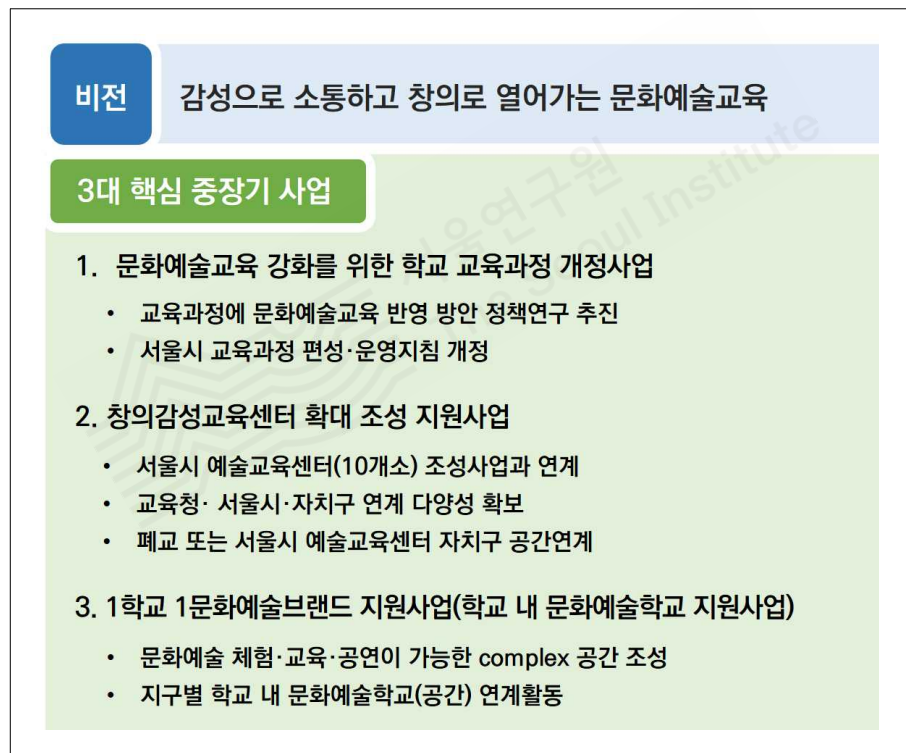
이외에도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는 예술동아리를 활성화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sup>6</sup>

<sup>5</sup> 초등학교 5~6학년 국어교과에 활동 중심의 연극 대단원을 개설하고, 중학교 국어에는 연극 소단원을 구성하며, 고등학교는 보통교과 일반선택과목에 「연극」과목이 개설된다.

는 예술·체육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적극 개발·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감수성 및 정서를 고양하고 협동과 배려 등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들의 지성, 감성, 인성을 깨우는 창의교육을 위해 「학교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문화예술로 꿈길을 가다」」를 수립하는 등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하려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발전계획의 핵심내용으로는 △문화예술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정 △창의감성교육센터 확대 조성 지원 △1학교 1문화예술브랜드 지원 등이 있다. 즉 학교교육과정에서 문화예술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강화함으로써 서울 학생들이 초·중·고를 거치는 동안 누구나 문화예술창작활동을 경험하고, 문화예술 기예(樂技) 하나 정도는 즐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림 7]  
서울시 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2020중장기  
발전계획」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혁신과, 2015, 「비전2020울림 프로젝트 문화예술로 꿈길을 가다 - 학교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6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학생수요를 반영한 자유학기활동(진로탐색활동, 주제선택활동, 예술·교육활동, 동아리활동)을 170시간 이상 편성하여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교육부, 2015년 11월 25일자,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계획 보도자료)

### 서울문화재단은 TA제도 바탕으로 독창적인 통합예술교육 진행<sup>7)</sup>

서울문화재단은 기존에 예술강사와 학교의 단순한 물리적 연결 속에서 예술강사에게 모든 것이 맡겨졌던 예술강사제도의 문제점과 학교예술교육의 질적 수준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 링컨센터 내 교육전담기관인 링컨센터에듀케이션의 예술가교사(이하 TA: Teaching Artist) 개념을 도입하여 서울문화재단 TA<sup>8)</sup>제도를 만들었다. 서울문화재단의 TA제도는 TA선발, 재교육, 공동연구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 학교파견수업, 평가 등의 내용으로 체계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TA제도를 바탕으로 서울문화재단에서는 예술교육 통합브랜드인 ‘서울창의예술교육’을 통해 ‘미적 체험(Aesthetic experience)’과 ‘통합예술’을 중심 개념으로 연극, 무용, 시각예술 등 예술장르 통합뿐만 아니라 교과 통합, 주제통합 등 재단만의 독창적인 통합예술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으로는 어린이 창의예술교육 사업(예술로돌봄, 예술로플러스)과 청소년 창의예술교육(서울창의예술교육중점학교)이 운영되고 있다. 어린이 창의예술교육으로는 초등돌봄교실과 연계한 ‘예술로돌봄’ 사업과 국어, 사회, 수학 등 정규 교과목 수업과 연계한 통합예술교육인 ‘예술로플러스’ 사업이 있다. ‘예술로플러스’는 교사와 TA의 협력수업모델을 도출하고 ‘예술로플러스’ 커리큘럼을 모든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해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올해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협력하여 현재 교육청 지원의 4개 교사연구동아리 중 하나로 지정되어 재단 TA와 학교 교사가 함께 다음 해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협력개발체계를 갖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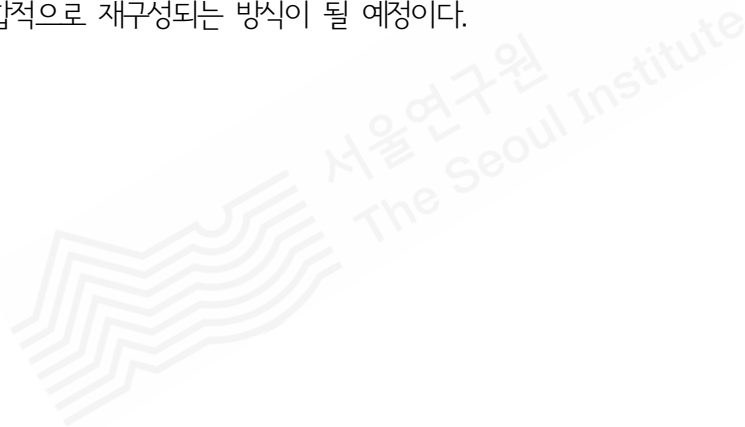
청소년 창의예술교육 ‘서울창의예술 중점운영학교’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학교 자유학기제 등 정규교육과정과 연계한 청소년 맞춤형 통합예술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6년 청소년 창의예술교육 사업은 14개 학교(학교당 4개 학급 기준, 총 56개 학급, 참여자 12,000명)에 14개 문화예술교육단체가 매칭되어 각 학교 수요와 대상 특성에 맞춤형으로 학기별 학급 단위의 8차시 교육과정이 지원되고 있다.

<sup>7)</sup> 서울연구원, 2016,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혁신방향 포럼 자료집」 중 임미혜, “창의예술교육과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 발제문을 바탕으로 정리

<sup>8)</sup> 서울문화재단 창의예술교육 사업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를 지칭하는 말로, 예술언어에 대한 이해 및 통합적 활용 능력을 갖추고 교육학적 역량을 겸비한 자로서 학습자를 삶에 대한 미적체험의 기회로 안내하는 자를 의미한다.

### 예술가교사 230명 육성해 어린이·청소년 창의예술교육지원사업 확대

2016년에 발표된 서울시 예술인플랜 중 예술인 사회적 예술일자리 창출사업의 하나로 2017년부터 예술가교사 육성지원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약 37.5억 원의 예산으로 약 230명의 예술가교사를 선발해 재교육과 공동연구를 통해 어린이·청소년 창의예술교육지원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선발된 TA는 연간 2회 총 80시간의 교육과정 참여를 통해 인문예술에 대한 이해와 청소년 인문예술 통합교육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하고, 팀티칭(3인1팀)방식으로 1팀당 연간 2개 학교(학기당 1개 학교, 4개 학급)에 파견되어 안정적인 환경과 조건 속에서 어린이 대상 통합예술교육 및 청소년 대상 인문예술통합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인문예술통합교육은 예술참여를 통한 경험의 축적으로 인문적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은 문학 기반의 인문적 사유 활동, 연극, 무용, 음악, 영상예술 중심의 신체적·표현적 예술활동이 통합적으로 재구성되는 방식이 될 예정이다.



## 2\_교육프로그램 양적 확대 치중하고 사업구조 이분화

###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철학·정책목표 성찰 없이 개별사업 중심으로 추진

지금까지 서울시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자체적인 필요와 계획에 따라 수행되었다기보다 중앙정부의 의지가 크게 반영되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어느새 초기의 문제의식이 사라지고, 문화복지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문화향유를 위한 양적 팽창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강하게 드러났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서울시 차원에서도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철학과 정책 목표에 대한 깊은 성찰과 논의과정 없이 개별사업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정책이 추진되었다.

이는 서울시 문화예술교육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저해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초조사와 통계, 서울시에서 수행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기록과 관리, 문화예술교육 인적 자원의 전문성과 역량개발 및 관리, 학교문화예술과 사회문화예술의 연계, 시민의 접근성 확대 등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과제들을 고민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도 없는 상황이다. 다만, 서울문화재단이 오랫동안 서울형 문화예술교육체계를 고민하고 기록한 성과가 있으며, 서울시 문화예술과에 예술교육팀이 신설(2016.8.)됨으로써 서울형 문화예술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구심점은 마련된 상태이다.

### 중앙정부 주도의 공급자 중심 문화예술 교육체계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

문화예술교육의 정책적 추진 배경에는 예술체험 위주의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활성화하고 공교육의 방향을 전환하려는 목표가 있었다.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적 도구에 대한 연마를 목표하기보다 그 도구의 활용을 통해 개인의 자율적인 표현과 상상력을 극대화하는 교육이며, 입시 중심의 공교육 시스템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안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문화예술교육이 적극적으로 추진된 지 10여 년이 흐른 지금,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잃고 사업 중심으로 추진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sup>9</sup>.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중앙정부 주도의 공급자 중심 교육체계에 있다.

<sup>9</sup> (사)문화사회연구소, 2012,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2012년 정기국회 정책자료집, pp.7-9.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영역은 중앙정부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영역과 서울시(서울문화재단)와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단위: 천 원, 개교)

구분	지원사업명		예산	지원학교
문체부 교육청 서울시	학교예술강사		10,145,756	1127
소계			10,145,756	1127개교
교육부	악기지원시범사업		1,113,000	213
	학생오케스트라·뮤지컬·연극지원		583,000	99
	예술중점학교 지원 <sup>10)</sup> (예술특성화 교육)		1,020,000	2
	지역연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시범교육지원청(지역연계 기반마련)		74,000	8개청
	전국 학교예술교육 페스티벌 참가교 지원		6,000	7
	예술드림학교(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		100,000	2
	예술교육거점학교		60,000	2
	연구 지원 개발	예술교과연구회	9,000	3팀
		문화예술교육 교원연구동아리	15,000	6팀
		지역연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수업연구회	3,000	1팀
창의인성수업연구회		60,000	20팀	
	ICT 수업콘텐츠 개발	28,000	1팀	
소계			3,071,000	325개교
서울시 교육청	1학교 1문화예술브랜드		200,000	50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꿈버스(찾아가는 공연)		200,000	50
	오케스트라 활성화지원		563,000	42
	합창축제 시범교육지원청 운영		20,000	2개청
	문화예술중심 창의감성학교		55,000	11
	서울시 협력 학교음악교육사업 지원		1,100,000	81
	서울 창의인성교육센터 운영		1,324,732	
소계			3,462,732	234개교
서울 문화 재단	어린이 창의예술교육(예술로돌봄, 예술로플러스)		800,000	252
	청소년 창의예술교육		350,000	
	서울창의예술아카데미(예술강사 및 교사 교육 프로그램)		250,000	55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운영		1,000,000	13
소계			2,400,000	320개교
총계			19,079,488	

**[표 4]**  
2016년 서울시  
학교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혁신과, 2016.3, “2016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추진계획”.  
서울문화재단, 2016, “2016년도 사업운영계획”.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시가 협력하고 있는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약 101억 원 규모로 1,127개교에 지원되고 있다. 교육부 지원사업은 악기지원사업, 오케스트라연극뮤지컬지원 등 총 7개 사업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5개 사업 등으로 325개교에 약 3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체사업으로는 1학교 1브랜드, 오케스트라 활성화 지원 등 6개 지원사업 및 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를 운영하며 34억 원 규모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서울문화재단은 예술가강사(TA)제도를 이용해 예술강사 제도의 질적 수준을 보완하여 초등돌봄교실과 초·중등 정규교과와 연계한 창의예술 교육사업, 서울창의예술아카데미,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운영 등을 총 24억 원의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전체 190억 원 규모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중앙(문화부)에서 사업을 지정해 지역에 분배하는 하향식 체계(중앙정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지역(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단체예술강사)로, 지역의 특성과 현장의 다양한 수요가 반영되기 힘든 구조이다.

중앙집중형 행정체계로 운영되다 보니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역할도 중앙정부의 문화예술교육정책사업을 지역에 전달·수행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역의 현황과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필요성에 목소리가 높아졌고, 중앙정부도 2014년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를 주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사업공급형태로 진행되면서 지역별 특성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구축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집중식 행정체계에서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한 지역분권형 행정체계로의 전환과 지역기관 및 단체들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및 파트너십 체계를 기반으로 한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자치 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

### 학교문화예술교육 비중이 압도적... 일반성인 대상 프로그램 비중은 낮아

문화예술교육사업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라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이분화되어 추진되었으며,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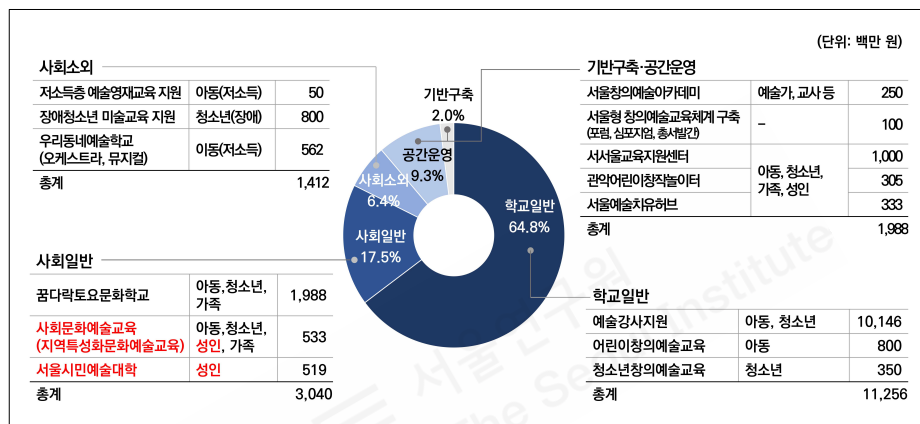
10 총 12학급 중 4학급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대응투자로 예산지원



있다. 예산 역시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압도적으로 높게 편성되어 있다.

서울시 문화본부와 서울문화재단의 2016년 문화예술교육 예산은 약 177억 원에 이른다(예술강사 지원사업 포함). 이 중 학교문화예술교육이 64.8%를 차지한 반면, 사회문화예술교육은 23.9%에 불과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sup>11</sup>. 사회문화예술교육 중에도 저소득 청소년이나 장애 청소년, 토요문화학교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의 비중이 높으며,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서울시민예술대학’과 ‘사회문화예술교육(지역특성화)’ 등 두 개 사업으로 전체 사업의 6.1%에 그치고 있다.

[그림 8]  
2016년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예산 분포



자료: 서울시 문화본부, 2016.2, “주요업무보고”. 서울문화재단, 2016, “2016년도 사업 운영계획”.

이처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비중이 낮은 것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서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 이외의 것’으로, 즉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잔여적 개념으로 정의함으로써, 사회문화예술교육이 지향하는 바나 적극적 의의를 담고 있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다. 그 결과 문화예술교육이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사업전달체계의

<sup>11</sup>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정의에 따르면 사회문화예술교육은 학교 교육과정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을 뜻한다. 통상적으로 사회문화예술교육을 군, 소년원 등의 시설에서 실시되는 교육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법적 정의에 충실하여 학교 외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모든 문화예술교육을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보았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1항은 문화예술교육을 다음과 같이 학교와 사회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가. 학교문화예술교육: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

나. 사회문화예술교육: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와 제24조의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

문제점이 발생한 반면, 일반시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은 지원체계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문화재단에서 시도 중인 ‘시민예술대학’을 제외하면 일반시민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강사풀 관리 및 재교육 관련 정보 공유 등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는 결국 일반시민이 문화예술교육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러나 시민의 문화적 권리 증진을 위해 서울시는 물리적, 경제적, 수준별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일반시민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의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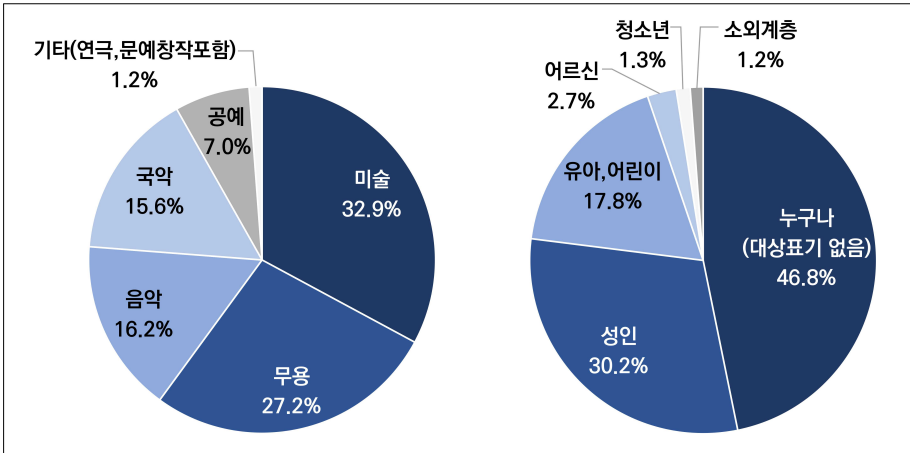
한편, 시대적 조류는 학교와 사회의 이분적 구조를 희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일상생활과 유리된 학교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연계형 문화예술교육체계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학기제 및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제도, 지역연계 예술교육활성화사업 등이 그 방증이다. 이 과정에서 학교와 지역문화예술의 인적·물적 자원과 연계를 통해 진행되는 지역연계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학교문화예술교육이 서울시교육청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학교나 교육지원청도 해당 지역에 대한 문화자원정보가 없어 어떻게 연계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 주민자치센터 문화예술프로그램은 내용적 타당성·시간적 접근성 떨어져

문화예술교육을 시민의 권리 차원에서 보자면, 문화예술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시간적, 내용적, 경제적 차원에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보편교육을 지향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과 달리,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접근성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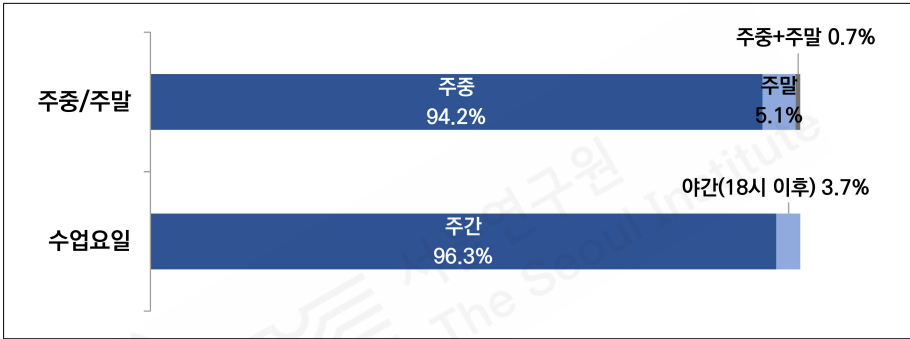
평생교육법외 기관 중 가장 많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미술, 무용, 음악, 국악 장르가 대부분이며, 몇 개의 유사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내용적 다양성이 떨어진다. 프로그램 대상자의 경우 성인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많으나 실제 참여자는 주부, 어르신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프로그램 운영시간 대가 주중(94.2%)과 주간(96.3%) 위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다양한 계층이 접근하기에는 내용적 타당성, 시간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9]  
2016년 서울시  
내 주민자치센터  
문화예술프로그램  
장르 및 대상자



자료: 서울시 내부조사 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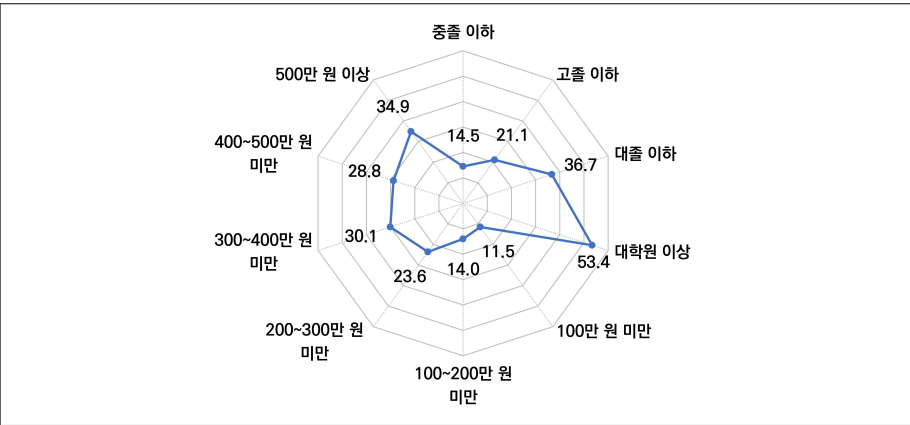
[그림 10]  
2016년 서울시  
내 주민자치센터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시간대



자료: 서울시 내부 조사자료 분석

또한 「2015 서울서베이」 조사결과 응답자 특성별로는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문화예술교육 경험률이 높게 나타나, 학력 및 소득 격차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양극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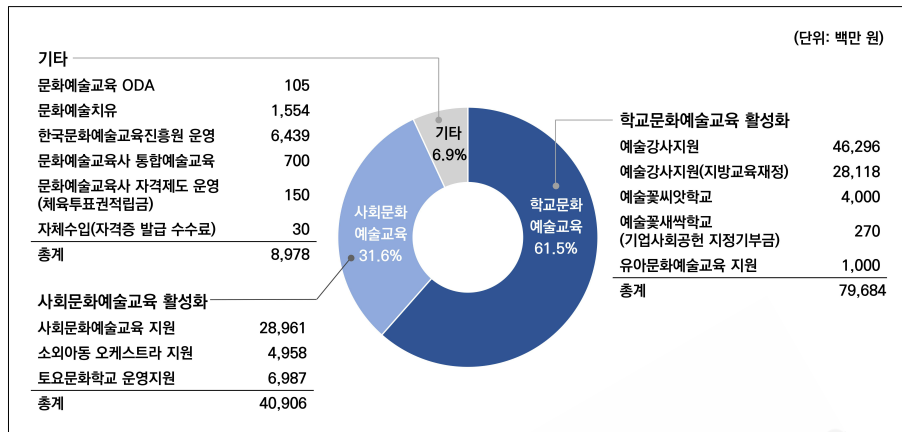
[그림 11]  
학력/소득수준별  
문화예술교육  
경험비율



자료: 서울시, 2015, 「서울서베이 조사결과 보고서(2014년 기준)」

##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핵심인 예술강사지원사업 둘러싼 갈등 끊이지 않아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핵심은 예술강사지원사업이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2016년 예산 중 예술강사지원사업은 지방교육재정 포함 744억 원으로 진흥원 전체 예산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12]  
2016년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예산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ALIO.

그러나 예술강사들이 예술교육전문가로서 안정되게 활동할 수 있는 지원환경 마련 등 질적인 측면은 도외시한 채 문화예술분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예술강사지원사업은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사업을 총괄하고, 지역센터(광역문화재단)가 근로계약 체결 등 실무 위탁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동안 근로계약체결주체의 중양 일원화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으며, 결국 올해는 14개 광역문화재단 중 13개가 학교 예술강사 수탁 반납을 결정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sup>12</sup>.

<sup>12</sup> “예술가를 학교에 파견해 예술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예술강사지원사업’이 파행 위기에 처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부터 해당 사업을 수탁 운영하는 전국 광역문화재단 14곳 가운데 13곳(대구문화재단 제외)이 수탁 반납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들 재단은 지난달 27일 내년도 학교 예술강사 고용계약 체결 불가 입장을 문체부에 전달했다...(중략) 최근 광역문화재단들이 학교 예술강사지원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예술강사의 처우 및 고용 문제에서 비롯됐다. 예술강사는 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시간당 강사료가 4만원으로 동결돼 있다. 그리고 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로 분류돼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의 적용은 물론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중략) 문체부와 광역문화재단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학교 예술강사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선 학교들 역시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장기화될 경우 수업에 차질을 빚게 돼 학생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예술강사노조 관계자는 “진흥원으로 계약주체가 일원화 되는 게 맞다고 본다. 다만 문체부와 지역 광역문화재단의 갈등이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예술강사들”이라고 밝혔다.”(국민일보, 2016.11.08.일자, “광역문화재단 14곳 중 13곳 ‘예술강사지원사업’ 포기... 내년도 학교예술교육 파행 우려”)

예술강사와 관련된 갈등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학교문화예술교육은 학교 교사들이 채울 수 없는 부분을 예술강사들이 학교로 들어가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경우, 학교 교사와 예술강사의 협업이 원활해야만 질적인 교육효과가 상승할 수 있는데, 현실은 예술강사가 교사를 대신하여 혼자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문화예술교육은 학교에서 자체적인 방향과 계획을 세우고 학교 중심에서 운영되어야 하지만 실제 현황은 학교 내에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학교와 교사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부족과 예술강사의 학교 교육에 대한 이해부족 등 협업관계가 잘 진행되지 않고, 역할 구분이 잘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03 / '시민 문화적 권리 보장' 4대 개선방안 수립 필요

### 1\_ '지역 기반 평생학습 실현'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구축

#### 지역사회 기반 평생학습체계 관점에서 정책·제도 새롭게 설계할 필요

학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재의 공급 중심 문화예술교육 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교육체계 개편이 요구된다. 개편 방향으로 지역사회 기반의 평생학습체계 관점에서 정책과 제도를 새롭게 설계할 것을 제안한다.

그 이유는 우선 시민문화권이 보장하는 일반시민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권리가 지역화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반시민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문화예술교육과 활동의 활성화를 요구하고 이에 기여할 권리, 문화예술교육 공간을 수시로 이용하고 그 운영에 참여할 권리, 필요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스스로 운영할 권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권리 등이다. 이러한 권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반시민이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회들과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일상생활에서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그 교육이 지역의 자원과 인력을 활용하여 시민의 수요에 부합하도록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는 중앙정부 주도로 운영되어 온 문화예술교육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즉, 지역을 매개로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이분화 구조를 극복하는 한편, 문화예술교육과 다른 교육지원제도(평생학습, 생활문화, 혁신교육지구, 마을공동체사업 등) 사이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지역문화예술교육을 둘러싼 생활권 내의 시설, 콘텐츠, 주체 등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가능하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청, 전문기관, 시민사회 등 생태계 차원의 접근 및 협력이 가능할 수 있다. 아울러 학교교육의 전체적인 방향도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를 강조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 차원에서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생태계를 구상하는 것이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

###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 활용 가능하게 중앙·지방 역할 재설계

서울시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서울시 문화본부, 서울문화재단(서울예술교육지원센터), 서울시교육청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중 많은 사업이 중앙으로부터 하향식으로 전달되는 체계이다. 그러나 지역 사회 기반 문화예술교육은 이와 같은 중앙정부 주도의 공급 중심형 교육체계로는 달성하기 어렵다. 지역주민(지역에 거주하는 학생과 일반시민)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며, 지역 내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기반 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중앙·지방의 역할이 재설계되어야 한다. 우선 서울시는 서울시 차원의 비전 계획을 가지고 지역사회 기반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추진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직접 사업수행은 최소화하고, 지역의 자율적인 교육생태계 형성을 위한 기반(물적, 인적, 제도적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한다. 이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예산을 이양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지역은 지역사회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추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는 지역 내에서 공공과 민간영역이 상호협력하여 지역주민이 원하는 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과 콘텐츠를 구현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말한다. 지역의 단위는 장기적으로는 생활권까지 고려해야 하지만, 현시점에서 행정력을 고려하였을 때 자치구 단위를 실행의 기본단위로 상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예술가, 교사,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등이 협업하여 그 지역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다.

## 2\_서울 특성 반영 ‘서울형 문화예술교육 마스터플랜’ 수립

###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비전 제시... 교육내용·대상·환경·주체 등 담겨야

지역사회 기반 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하는 첫 단계로 서울시의 문화예술교육의 비전계획(서울형 문화예술교육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비전과 전략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교육 환경 분석, △서울시 문화예술

교육 운영실태와 수요 분석, △관련 법률 및 제도 검토, △서울형 문화예술교육의 비전과 목표, △추진과제 및 추진체계, △재정계획 등이 될 것이다. 재정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서울시의 자율적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지역문화예술교육 예산의 포괄적 교부 등 분권화를 요구할 수도 있다. 서울시 문화예술교육의 비전을 지역사회 기반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구축이라고 할 때,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방향은 교육내용, 교육대상, 교육환경 및 주체의 측면에서 제시될 수 있다.

### 교육내용은 문화교육으로 확대… 교육대상도 수요집단별로 다원화

교육내용이 예술(기능) 중심에서 문화교육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교육은 교육내용이 예술 그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사고방식과 행동체계 및 삶의 기술(소통과 포용능력)을 학습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프랑스나 독일은 프랑스혁명과 나치지배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의 도구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예술적 기여의 연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정신을 구현하는 방식이자 시민성을 학습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이 본질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 중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하느냐는 논쟁의 여지가 있으나<sup>13</sup>, 분명한 것은 문화예술교육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구성되므로 개인과 사회의 문제와 유리되어 존재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교육대상은 수요집단별로 다원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교육체계는 연령대별, 생애주기별 교육대상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다양성 시대에 접어들어 교육환경이 다변화하면서 지역사회 내 교육수요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연령대별로 표준적인 교육수요를 공유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개인의 수준과 욕구에 따라 교육수요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며, 미래에는 더욱

<sup>13</sup> 문화예술교육의 도구적 혜택에 집중할 경우 예술의 본질에 대한 깊이가 알아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하고, 반대로 본질적 혜택에 집중할 경우 문화예술교육의 효용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주목을 받지 못해 지속적인 교육의 기회를 가지기 힘들어질 수 있다(장현선, 2015c, 『학교문화예술교육 중장기 사업전략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p.48.).



그러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지역사회 기반 교육체계에서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구성원이 존재하며, 저마다의 욕구에 따라 서로 다른 교육수요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교육대상을 연령대나 세대 등이 아니라 수요에 따라 다양한 집단으로 파악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교육환경·주체는 지역순환형 체계를 지향하고 서울시 지원조례도 제정

교육환경과 주체는 지역순환형 체계를 지향해야 한다. 지역 내 학교·복지시설·평생교육기관·문화시설 등을 잇는 통합형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기반 문화예술교육체계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교육공간과 자원 등을 공유하며 기관별로 수행되고 있던 문화예술교육들은 지역사회 중심 교육으로 변화시켜 간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다. 또한 학교시설을 포함한 지역 내 유휴공간을 발굴 및 개방하여 일상생활공간에서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주체도 지역 내에서 발굴·재생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지역예술가 중심으로 강사풀을 구축하고, 이들이 교육을 담당하며, 교육받은 주민들 스스로가 교육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순환적 구조를 생각할 수 있다.

비전계획의 수립 및 서울형 문화예술교육의 추진 근거로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조례에는 △서울시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원칙, △서울형 문화예술교육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시행계획,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 △지역문화예술교육협의체 설치 및 운영, △지역문화예술교육 인력 양성,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초조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3\_‘주체 간 정책채널 기능’ 자치구별 문화예술교육 협의체 운영

**공교육, 문화복지, 문화예술교육, 평생교육 등이 통섭적으로 논의돼야**

지역사회 기반 문화예술교육의 실행을 위해서는 지역 내 공공민간영역 문화예술교육 주체들 상호 간 실행력을 갖는 정책협의 채널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공교육, 문화복지, 공공예술, 문화예술교육, 평생교육 등의 분야가 통섭적으로 논의되는 지역문화예술교육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설치근거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9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지역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문화예술자원의 연계 및 활용 등을 하고자 지역문화예술교육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제시된 운영방식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육감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연 2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는 실효성 있는 지역문화예술교육 추진체계로 기능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따라서 서울문화예술교육협의회 설치와 함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지역별 추진체계를 보완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즉, 자치구별 '(가칭)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내 공공·민간영역 문화예술교육 주체들이 모여 상호 간에 실행력을 갖는 정책채널로 기능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자치구별로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 교육지원청,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자치구, 지역문화재단, 지역예술가, 학교 교사 등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교육, 문화복지, 공공예술, 문화예술교육, 평생교육 등의 분야를 통섭적으로 논의하도록 한다.

서울시는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역량이 있는 자치구부터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을 지원하여 성공 모델을 만들고 이를 확산시키도록 해야 한다.

#### 사례 : 성북구 푸른누리 마을학교<sup>14</sup>

푸른누리마을학교는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마을과 학교 상생프로젝트> 사업의 지원을 받아 시작하였다. 성북문화재단과 공유성북원탁회의라는 민간 문화예술단체가 성북구 소재 동구여자중학교(서울형 혁신학교 지정학교)와 손잡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학교 동아리는 지역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을 마을강사로 초빙하여 운영되며, 그 외 학생 대상 마을 자원조사, 교사마을 탐방, 졸업생과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한 과학캠프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sup>14</sup> 최혜자 외, 2015, 「2015 마을과 학교 상생 프로젝트 모니터링 및 사례연구 보고서」,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 법 개정으로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위상 재정립하고 전문성 강화 바람직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는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여, 지역문화예술교육의 허브기관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 문화예술교육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구로는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가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는 서울시의 상황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하기보다 중앙정부의 사업을 대행하는 기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지역별, 계층별로 다변화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수요를 섬세하게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기반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한 허브기능을 수행하도록 역할과 기능을 정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0조를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가 지역분권형 추진체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관계와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며 재정보조 및 운영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표 5]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 개정

구분	내 용
현안	...(중략)... 문화체육부 장관은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의 효율적인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참여주체 간의 협의·조정 그 밖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기초자치단체장과 협의를 거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중략)...
변경안	...(중략)... <b>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b>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의 효율적인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참여주체 간의 협의·조정 그 밖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b>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를 지원할 수 있다</b> ...(중략)...

지역문화예술교육의 허브기관으로서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에 요구되는 기능은 △서울시 문화예술교육정책의 기획 및 지원,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초통계조사 및 시민의 문화예술교육 수요조사, △문화예술교육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자치구별 문화예술교육 협의체 지원, △중앙정부 매칭사업 주관 등이다. 평생교육분야는 매년 기초통계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반해, 문화예술교육분야는 기초통계조사가 없으며,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하는 시스템도 부족하다. 문화예술교육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문화예술교육 기초통계, 강사풀 DB, 교육프로그램 DB, 학습교안과 우수사례 DB 등을 구축하고 공유확산할 필요가 있다.

## 4\_지역문화예술교육 허브 역할 ‘지역예술교육센터’ 단계 확충



###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모델 지속적으로 생산해 확산하는 거점시설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 전략은 서울 전체에 적용되는 공통의 모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수요와 가용자원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하는 구조이다. 게다가 문화예술교육은 직접체험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문화예술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공간이 일상생활권 내에 존재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 문화예술교육은 기존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성을 기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별로 교육 거점공간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모델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이를 확산할 수 있는 거점시설로 <지역예술교육센터>의 단계적 확충을 제안한다. 이 거점시설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지역주체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개발확산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지역 문화예술교육 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한 거점 역할도 함께 수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10개소 조성을 목표로 ‘서서울예술교육센터’를 개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여건 개선을 위해 권역별로 창의인성교육센터를 운영하여 창의·감성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 내에 서부권센터가 2014년에 개원하였으며, 서울동명초등학교 내에 동부권센터를 2018년 개원할 예정이다. <지역예술교육센터>는 이들 센터와 기능을 공유하거나 연계하여 단계적 확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우선 권역별로 1개소씩 설치하며, 최종적으로는 25개 자치구에 1개소씩 설치를 목표로 하도록 한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거점시설이 현재 아동·청소년 교육시설로 우선 출발하고 있지만, 사업이 안정화되면 교육대상을 일반성인까지 확대하여야 한다. 이들 거점

시설이 수행하는 역할은 일상적인 문화예술교육체계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고 이를 학생과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며, 우수한 교육프로그램 모델을 서울시 전체에 확산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술장르 간 통합교육프로그램, 예술과 철학, 인문학이 접목된 프로그램, 미디어와 IT기술을 활용한 예술교육프로그램 등이 그 내용이 될 것이다. 아울러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은 수요맞춤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일과시간 중 운영되도록 하며, 직장인을 위해서는 평일 저녁과 주말에도 강좌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 강좌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외에도 일상적으로 문화예술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주 예술가교사가 필요하다.

구분	핀란드 아난탈로 아트센터 (Annantalo Arts center)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소개	핀란드 헬싱키에 소재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센터로 폐교건물을 헬싱키시가 1987년에 예술교육센터로 개조함	양천구 신월동에 소재한 아동청소년 대상 예술교육센터로 옛 김포가 압장을 리모델링하여 조성된 미적 체험 기반의 예술교육공간 (2016년 10월 개관)
운영 목적	경쟁을 통해 예술가를 길러내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예술을 가르침으로써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	어린이·청소년의 '예술적으로 놀 권리'를 위한 새로운 공간 운영모델 구축
공간 구성	화실, 연극실, 스튜디오, 사진실, 카툰실, 도자기실 등 전문적 장비 및 재료 비치	스튜디오(교육실) 3실, 다목적실, 수조(야외교육공간), TA연구실, 교육준비실 등
대표 프로그램	학교연계 "5x2" 프로그램 운영 헬싱키 내 모든 초·중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주중 초·중등생 학교연계 프로그램 및 주말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 (2016년 7개 프로그램 시범운영)
인력	정규직 15명, 프로젝트 소속의 강사 10명, 프리랜서 예술가 및 예술교사 50명	기획·행정인력: 5명 상주 예술가교사(TA)운영 예정
예산	약 28억 7천만 원(헬싱키시 지원)	약 10억 원(서울시 지원)
사진	 	

**[표 6]**  
핀란드 아난탈로  
아트센터와  
서울시  
서서울예술교육  
센터 사례

자료: 광덕주·남인우·임미혜, 2015, 『서울문화재단 예술 총서3 유럽에서 만난 예술교육』, 이인재.  
<http://www.sfac.or.kr>(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은 지역 유희자원·학교 활용에 우선순위 둘 필요

지역사회 기반 문화예술교육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 일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교육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자치구별 1개소를 목표로 하는 거점시설만으로는 주민의 일상적 수요를 모두 만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화예술인프라 확충은 신규시설 건립보다 지역의 유희자원을 발굴하여 활용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자치구 내 활용 가능한 유희시설을 발굴하여 교육 및 연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공공시설은 야간이나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간 확충의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 또한 문화원, 문화의집, 문화센터, 청소년센터 등 자치구 내에서 이미 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시설과의 협력도 중요하다. <지역예술교육센터>에서 개발된 혁신적 교육프로그램을 이들 시설과 공유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교육 확산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유희공간 확보의 차원에서 학교 활용방안의 모색도 필요하다. 학생 수 감소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어, 기존의 학교 공간 중 유희공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는 지역생활권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접근성 측면에서도 매우 유리하다. 교육청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학교는 공간을 제공하고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리모델링 비용을 제공하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당장 학교의 저항이 클 수 있으나, 시간을 들여 우수모델을 만들고 이를 확산시키는 전략을 취하도록 한다.

### 예술강사지원사업 구조재편으로 서울형 예술강사제 전향적으로 운영해야

예술강사지원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예술교육전문가로 인정되게 활동할 수 있는 지원환경 마련 등 질적인 측면을 도외시한 채 문화예술분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사업이 진행되어온 까닭이 크다. 중앙정부의 지원에 크게 의지하는 사업이지만, 사업구조 재편을 통해 서울형 예술강사제를 전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역기반 예술생태계 구축의 연장선상에서 고려해야 한다. 즉, 예술강사들의 강사풀을 지역 중심으로 구축하고, 지역 내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수요와 매칭하는 방식이다. 예술강사의 재교육을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담당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문화예술교육 기법을 지속적으로 익히도록 관리하며, 각 예술강사의 능력과 특징을 센터에서 보증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종속되어 있는 예산구조의 재편이나 서울시 독자적인 예산 마련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곽덕주·남인우·임미혜, 2015,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총서3 유럽에서 만난 예술교육」, 이안재.
- 문화체육관광부, 2010, 「문화향수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2012, 「문화향수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2014, 「문화향수실태조사」.
- 박신의, 2013, “예술의 사회적 영향 연구 분석과 정책적 함의”, 「2013 문화정책논총」 제27집 1호, p.69,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사)문화사회연구소, 2012,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2012년 정기국회 정책자료집, pp.7-9.
- 서울시 평생교육정책관, 2016.3, “2015년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 결과”.
- 서울문화재단, 2015, 「2014 서울시민 문화향유실태조사」.
- 서울문화재단, 2016, “2016년도 사업 운영계획”.
- 서울연구원, 2016,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혁신방향 포럼 자료집」.
- 서울특별시, 2015, 「서울서베이 조사결과 보고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혁신과, 2016.3, “2016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추진계획”.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혁신과, 2015, 「비전2020올림픽 프로젝트 문화예술로 꿈길을 가다 - 학교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혁신과, 2016.7, “2016 서울지역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현황”.
- 서울시 문화본부, 2016.2, “주요업무보고”, 제266회 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장현선, 2015c, 「학교문화예술교육 중장기 사업전략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조현성, 2016, 「문화예술교육정책 중장기 추진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최혜자 외, 2015, 「2015 마을과 학교 상생 프로젝트 모니터링 및 사례연구 보고서」,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5a, 「2015 학교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5b, 「2015 학교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지역통계편(서울)」.
- 국민일보, 2016.11.08.일자, “광역문화재단 14곳 중 13곳 ‘예술강사지원사업’ 포기… 내년도 학교예술교육 파행 우려”.
- 교육부, 2016.11.25.일자,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계획 보도자료”.

[http://www.sfac.or.kr/html/artspace/arteducation\\_introduction.asp](http://www.sfac.or.kr/html/artspace/arteducation_introduction.asp)(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www.alio.go.kr/managementOrganView.do?seq=C0320>(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ALIO).

---

서울연 2016-OR-15

서울시민의 문화적 권리 보장 차원에서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4대 개선방안 수립

발행인 \_ 김수현

발행일 \_ 2016년 12월 31일

발행처 \_ 서울연구원

비매품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

본 출판물의 저작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